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김 일 환



직장 동료가 물었다. “요즘 개인과외를 받으려면 한 달에 얼마를 쥐어야 할까?”

필자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자식에게 뛰는 제일 싫은 것이 인지상정이라지만 샐러리맨 월급에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큰 부담이 간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들은 이야기다. 학원비는 중학생의 경우 영어·수학 합쳐서 한 달에 최소 50만 원, 눈술을 추가하면 70만 원 정도라고 한다.

물론 필자가 들은 것은 일반적인 기준이다.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교재비네, 뒤네 해서 한 학생당 월 80만 원이 훌쩍 넘는다. 개인과외를 할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소위 공부를 꿰하는 학생들의 경우 개인과외를 받는데 학원비의 두 배 이상을 생각해야한다고 한다.

가정경제 폐해화 주범

사교육비가 가계의 목을 죄는 형국이다. 그렇다고 공부하려는 자식들의 학원이나 과외 욕구를 부모가 꺾을 수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무리해서 시키는 과외는 가정경제를 불과 시킨다.

가장 갈수록 옥죄어오는 사교육 폐해를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또 이런 현상은 누구의 책임인가.

돌이켜보면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공약의 제일 앞자리는 교육개혁이었고, 그 핵심은 사교육 폐쇄잡기였다. 그렇다면 임기 말인 지금은 어떠한가.

성과는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다. 실제 내기에 급급한 건설현장식 몰아붙이기가

육 때려잡기 정책에 사실 철퇴를 맞았다. 잘만했으면 그동안 사교육의 블랙홀과 같은 이 교육 공룡을 잡아 사교육이 회생 불능까지 갈 수도 있었다. 외교부·문화부를 목표로 한 학원들이 주도해 사교육 비를 전정부지로 옮겨왔기에 그 학원들을 퇴출시키면 사교육을 잡는 폐거리를 이를 수 있었다.

하지만 앞뒤 안 가린 입학사정관제의 전면 확대와 내신 강화 방안이라는 제도를 내놓음으로써 학원들에게 재기 기회를 주고 말았다. 봉고 직전의 학원들이 “내신 만 좋으면 특목고 가고, 명문 대학 간다”는 달콤함으로 무장하고, 내신 전문 학원으로 발 빠르게 변신해 살아남았다.

사교육비 이번엔 꼭 잡아야 합니다

정작 현장은 없는 어정쩡한 결과를 냉고 말았다.

교육부는 MB정부의 국정철학에 매몰돼 실적을 내겠다는 욕심이 지나쳤다. 추첨을 통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신입생 선발이나 학원 심야교습 금지 법제화 같은 검증 안 된 제도들이 쏟아져 나왔다. 결국 검증없이 밀어붙인 부모합이 일을 그르쳤다.

사교육을 잡겠다고 내놓은 교육정책들이 사교육을 끌어 키웠다. 입학사정관제, 심야교습 금지 같은 제도들이 되레 사교육 번식에 최고의 자양분이 되었다. 외교와 일부 잘나가는 명문교들이 사교

도 심야교습만 잡으면 학생들이 학원을 외면하게 꽤 공교육이 살아날 것이라는 단순한 발상이 사교육비를 올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심야교습이 금지되자 개인과외나 소그룹 과외, 주말·휴일반 교습이 기승을 부렸다. 그로 인해 사교육비가 전보다 더 들어가게 됐다. 올라간 사교육비는 떨어질지를 모르고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정권말인 지금까지도 교육부는 사교육 폐쇄잡기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듯 하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어떻게 정책을 바꿔 가야하는지 국민을 향한 자기고백이 없다. 기준고시된 학원비와 과외비가 잘 지켜지고 있다는 일안한 통계들을

읊고자 있을 뿐이다. 도대체 사교육 현장에 대한 정확한 현실 인식이나 있는지 의문이다. 진보교육감과 기싸움이나 하는데 시간을 허비할 정작 학부모들의 비명소리는 듣기나 하는지.. 사교육비 대느라 대리운전을 하고 심지어는 파출부를 나가는 학부모들의 사연을 들어보기나 했는지...

사교육비 법적 규제가 해법

대선이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후보들이 교육공약을 내놓기 시작했다. 사교육 균질에 관한 내용도 들어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행간을 읽어보면 근본적인 대책은 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독처럼 서서히 퍼져 가정경제를 폐해시키고 있는 사교육비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자금의 상황에서는 페도난민의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사실 정책의 성패는 내용보다 의지에 달려 있다. 차기 정권에서 강력한 균질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사교육비 때문에 우리 사회가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교육은 국가의 장래와 직결되는 일기이며 더욱 그렇다.

필자는 간곡히 요청한다. 대선 후보들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그 어떤 공약보다 우선적으로 실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부르는게 값인 학원비와 과외비에 과감히 칼을 대겠다고, 법이 필요하다면 입법을 해서라도 사교육비를 꼭 잡겠다고,

(방송보도부정 경 여론제작부장)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해야 한다

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활동보조인 외에 야간·주말에 필요한 인력을 본인의 자부담을 들어 도움을 받고 있다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고 한숨짓는다.

1급 지적장애인 - 20대 초반에 교통사고로 경주를 다쳐 목 아래로는 꼽짝할 수 없는 순기각조치도 타인에게 의지해 식사지원을 받고, 신변처리, 가사 등의 일상생활지원이 필요하다.(활동보조인이 지원되는 시간에는 식사제공을 받지만 활동보조인이 지원되지 않는 날은 하루종일 굶는 것은 물론이고 신변처리 등의 일상생활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1급 지적장애인 - 혼자서는 자기신변보호나 일상생활이 힘든 발달장애인.

이로oth 수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자기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 정부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몸에 등급을 매겨가면서 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활동보조 상한제를 두고, 또 엄연히 국가책임인데도 사회적 안전망 없이 가족에게 부양의 의무를 떠넘기는 부양의무제는 즉각 종단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에게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24시간의 활동보조인 지원이 안 되어 집에 그리고 본 기관 회원들 중 혼자 살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생각된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2011. 1. 4 제정)

이제 12월 대선이 머지않았다. 대선주자들 서로 경쟁하듯 복지정책을 발표하고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다.

순간의 인기영합주의와 실속없는 공약에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절실히 원하고 국민을 위한 진실되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을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로 인해 자신의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여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중증장애인들은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삶이 박탈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활동보조인은 어떤 부가적인 복지 서비스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본권임을 대선주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사)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 회장

은펜클럽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서미정



불이 나 혼자서는 꼽짝할 수 없어 화염 속에서 숨진 비극을 경험했다.

누군가의 지원 없이는 혼자서 활동이 어려워서 필요한 사람에게 24시간 보장되었더라면 이 같은 참변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인데..”

언제까지 ‘소 읊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을 되풀이할 것인가?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으려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야 하고 부양의무제도 폐지 반드시 되어야 한다.

필자는 활동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는 2011년 10월 활동지원제도가

분석 시험된 이후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해 “장애등급제를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의 보편적 복지성을 실현하라고 줄기차게 법개정을 요구해오고 있었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1급 뇌병변장애인 - 혼자서는 자기신변보호나 일상생활이 힘든 발달장애인.

이로oth 수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자기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 정부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몸에 등급을 매겨가면서 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활동보조 상한제를 두고, 또 엄연히 국가책임인데도 사회적 안전망 없이 가족에게 부양의 의무를 떠넘기는 부양의무제는 즉각 종단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에게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24시간의 활동보조인 지원이 안 되어 집에

단력이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가장 훌륭한 판단력을 신속하면서도 그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을 제일로 보았으며, 현명하지는 않지만 신속히 내리는 판단을 다음으로, 가장 나쁜 판단력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 함을 말했다.

지도자 또는 경영자는 하루에도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그 판단 하나에 조직원은 물론, 조직의 생사가 결정될 만큼 중요한 판단들이 매시간을 기다리고 있으니 현명하고 신속한 결정으로 다음에 후회하지 않도록 판단을 잘 내려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리더십에 필요한 조건들을 결단력과 용기가 있어야 하며, 문화적인 감각과 함께 유연하고 너그러워야 할 뿐만 아니라, 조직원들이 친근하게 따를 수 있는 인간미와 시대적인 유머 및 대국적인 시야도 필요로 할 것이다.

(농협 동광주지점장)

이 시대 리더십에 필요한 조건들

박안수



올해는 우리 나라를 비롯해 미국 등 많은 나라들이 대통령 또는 수상들의 선거가 있는데, 최고의 지도자를 포함해 모든 지도자와 경영자의 가장 큰 덕목은 아마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

리더십은 학자들에 따라 저마다 다르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국가를 포함한 어떤 조직이나 기업에서 일반적인 관리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도적 기능을 발휘하는 과정이나 영향력으로 보고 있는데,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의 조건 즉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필요로 할 것이다.

첫째, 조직원들에게 이상이 고결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21세기 지도자는 국민과 조직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지 못하면 그는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왜! 지금도 심가

위해서는 반드시 깨끗함인 ‘청(淸)’이 있어야 했던 것을 우리들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지난날 우리의 정치사를 보면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해 많은 지도자들이 줄줄이 범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도 우리들이 황희 정승과 미국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을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퇴임 후에도 더욱 존경 받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나 폴란드의 바웬사처럼 우리 나라에서도 이런 지도자는 이제 존경을 받기가 어려워. ‘나를 따르라’는 카리스마보다는 조용하게 정치적인 역할과 조정자적인 위치에서 열심히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만 훌륭한 지도자 또는 경영자가 될 것이다.

셋째, 가장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가 원칙과 현실을 중시하는 도덕성 즉 청렴결백이다. 하기야 옛날 인재를 등용할 때 참고했던 관인팔법에 보면 재상이나 왕이 되기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오피니언

시설

지역정치권, 국책예산 확보 총력전 펴라

내년도 전남지역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F1대회 국고 지원 및 신안 새천년대교 건설 사업비, 목포항 재해안전망 구축 실시설계비 등 대부분의 지역 현안사업비가 2013년도 정부 예산에서 대거 누락됐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연 의원에 따르면 신안 압해~암태도를 잇는 새천년대교 건설 사업은 국토해양부의 자체 예산 삭감으로 당초 완공 계획보다 7년이나 늦어질 전망이라고 한다.

국토부는 내년도 필요 예산을 710억 원이라고 판단해 놓고도 실제 472억 원만 신청했고, 기획재정부는 국토부 요구액의 65%인 310억 원만 편성했다. 계획대로 완공하려면 내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710억 원이 필요함에도 턱없이 적은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매년 국비 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F1대회 국비 지원도 역시 여전히 오리부중이다. 대선에만 둘둘하는 우(遇)를 범해선 안 된다. 전남도 역시 지역정치권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비 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노인들의 잇따른 비극 두고만 볼 건가

최근 노인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치매로 인한 살인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노인들의 이러한 비극은 경제적 궁핍과 질병, 그리고 이를 외면하는 정부와 사회, 가족의 무관심 때문이라는 점에서 안타깝고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달 29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아파트에 사는 A(78)씨가 12층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우울증을 앓고 있던 A씨가 이를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달 25일에는 교통사고 후유증에 시달리던 C(72)씨가 가족에게 “고생만 시켜 미안하다”는 내용의 전화를 한 뒤 광주시 동구 선교저수지에 투신해 숨졌다.

특히 광주·전남은 지난해 65세 이상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각각 65.1명과 70.7명으로 증가 추세인데다, 전국 평균 46.1명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치라는 점에서 적극적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자살 고위험군인 노인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예방·관리하는 시스템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또 광주·전남이 도·농 복합지역인 만큼 여가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복지여건을 강화하고, 농악 등의 관리를 체계화해 자살 예방에 나서야 한다.

無等鼓

인류가 오늘날 지난 기술로도 짓기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 고대 건축물이 적지 않다. 고대 7대 불가사의에 포함되는 이집트 기자의 쿠푸왕 피라미드와 메소포타미아 바빌론의 공중정원, 올림피아의 제우스상, 아페로스의 아르테미스 신전, 할리카르나소스의 마우솔로스 능묘, 로도스의 크로이소스 거상,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파로스 등대가 대표적이다.

</div